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7. 1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7월 13일(수) 09:40~18:3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93호~제95호 및 제115~제116호, 제122호~제126호, 제129호~제130호, 보고 제33호)

이 명 순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22호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23호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24호 『마스틴투자운용(주)의 (주)마스틴에프앤아이
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 『코리아신탁(주)의 코리아프라퍼티(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
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3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
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94호 『아름드리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95호 『브이아이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15호 『현대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16호 『제이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는 본 건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 담당부서가 협의 하에 마련한 OEM펀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해당 기준을 본 건에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에 동의함. 향후에도 OEM펀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안이 있을 경우 동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 주시기 바람. 동 기준을 본 건 사안에 적용한 결과에 따라, 증선위는 아릅드리자산운용(주)의 과태료 수준과 관련하여 ‘위반동기’를 한 단계 감경하고자 함. 지적대상 5개 펀드 중 2개 펀드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여 펀드설정에 관한 판단을 하였으며, 기본적인 투자구조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은 판매사가 한 것으로 보이나, 자산운용사가 일부 투자구조를 경미하게나마 변경하는 등 투자위험에 대한 자체 검토 노력을 일정부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2건에 대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하겠음. 한편, 나머지 4개 운용사의 경우 추가로 참작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제93호·제95호·제115호·제116호) 및 수정의결(제94호)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제93호·제95호·제115호·제116호) 및 수정의결*(제94호)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6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27호 『지스마트글로벌(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주)OOOOOOOO로부터 광고사업권 일체를 양수 받았고, 이후 일부 광고사업권을 (유)OOOOO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주된 내용은 광고사업권의 70%를 양도하고 대가도 회사가 양수한 금액의 70% 수준으로 한 것인데, 본 건 광고사업권은 총 10구좌이고 공익비율이 30%로서 공익비율은 10구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7구좌는 상업광고, 3구좌는 공익광고 이렇게 나누

어서 판단할 수는 없음. 계약서를 살펴봐도 7구좌가 상업 광고만으로 운영된다고 해석된 내용이 없고, 당시 (유)OOOOOOOO에는 광고영업조직이 없고 오히려 회사가 광고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유)OOOOOOOO는 본 광고사업권 전체 중 70% 수익권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었음. 회사의 광고매출 감소가 2018년 4분기에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감사인은 이를 실질적인 감소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광고사업권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았고 2019년 3월초까지 확보한 광고계약금액이 17억 원으로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1월에 발간한 '2018 옥외광고 통계'를 보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관련 매체의 매출이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

○ (위원) (유)OOOOOOOO에 대한 수익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 (진술인) 없었음.

○ (위원) 감사 시점의 상황 및 제공된 정보에 대해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조서화가 되어 있는지?

▶ (진술인) 조서화하지는 못했음.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님.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 『(주)이엠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임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직함과 달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사주 측은 자신들만 사용하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운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며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주도하였음. 또한, 대여금 과대계상과 관련해 해당 자금들은 2018년 9월에 대여가 이루어지고 사적유용이 되었는데 000이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직전 또는 직후여서 대여금 체결과는 전혀 무관하였고, 10월에 선임된 000도 마찬가지로 임. 두 사람 모두 대여금 횡령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법원은 실사주 측에는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나 000이나 000에게는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도 전혀 없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 및 근거를 바탕으로 대여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첫 번째로는 당시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감사보고서인 (주)00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은 129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주)OOO과 (주)OOOOOOOOOO는 (주)OO과 달리 2018년 신설법인이라 재무제표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관련 선급금의 일부를 상환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세 번째로는 실사주 측 관련자에게 출금 경위를 문의하였을 때 정상적인 대여금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주)OO과 (주)OOO의 경영진이 정상적인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날인하여 제공하였는데 당사자로서는 실제 빌리지 않은 자금에 대한 계약서를 날인해주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한다고만 생각하였음. 대여금 과대계상과 동일하게 펀드자금이 횡령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펀드가 손상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음.

- (위원) 대출과 관련하여 결산시점에 금전대차계약서와 담보물 원본이 분실되었는데 감사인에게 전달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차주 쪽에 대표님이 연락하셔서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인한테 제출을 했음. 담보물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음.
- (위원) 1심에서는 (주)OOO에 20억 원 추가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OOO씨와 OOO 대표가 횡령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지인의 추천으로 감사가 되기는 했는데 중간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감사 사임을 했는데 아마 제 등기가 미루어지다가 결국은 주총 없이 지금까지 되어서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날인을 하면서 감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음.

○ (위원) 실질적으로 사임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2019년 3월까지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감사보고서 검토하신 그 시기까지 급여를 수령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감사인은 펀드의 적정성 감사를 위해 OOOOOO으로부터 금융기관조회를 통해 이 사건 펀드의 기준가격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감액사유가 없었고 조회서 금액과 회사 재무제표 금액이 일치하는 점도 확인하였음. 이 중

거는 감사인 입장에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첫째, 위 OOOOO로부터 확보한 금융기관조회서는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문서형태의 증거여서 회계감사기준상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임. 둘째, OOOOO이 회신한 위 금융기관조회서상 평가금액은 자본시장법상의 기준가격으로서 이 기준가격은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이 평가하여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셋째, IFRS적용실무 해설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검증된 중개인 공시가격은 명백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Level 2)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넷째, 2019년 3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지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은 2018년도 보고기간말 당시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 가량만 경과한 자산이었음. 다음으로 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적항목임. 첫째, 감사인은 기말에 존재하는 대여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빠짐없이 모두 검토하였음. 둘째,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의 원본대조확인서에 따르면 감사대상회사가 (주)OOO에 2018년 7월2일에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해 담보로 (주)OO가 2018년 5월31일 발행한 권면액 3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원본을 실물제공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주)OO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사실까지 확인

하였음. 결국 2018년도부터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지 못한 것은 회사 측의 감사방해가 근본적인 원인임. 한편, 본 사안에서 대여금에 대한 허위담보를 제공한 회사인 (주)OO는 이 건과 별도로 금감원 회계감리를 통해 고의의 회계분식으로 조치된 사실이 있음. 해당 사건에서 감사인에게 내려진 조치와의 형평도 감안해 주셨으면 함.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2018년도 (주)OOO에 대한 대여금 45.2억 원의 대손충당금 산정시 2019년도 중에 회수된 34억 원에서 신규 대출 20억 원을 차감한 순액 14억 원만 2018년도에 회수 가능했던 금액으로 주장함. 피조치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지적금액 판단시 이점에 대해서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 금감원에서는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영업활동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나 관계 회사에 대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래이다, 그래서 설령 펀드를 연결하지 않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현황 등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음. 감사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 (진술인)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 3개월 밖에 안 된 펀드 내용이었고 실제로 조회절차나 조회결과 등 모든 것에 큰 무리가 없었음. 이 펀드 기준가격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감사인이 신뢰한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는 의견임.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2시 03분 정회)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13시 3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29호 『(주)알루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적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함. 그렇지만 송구하오나 조치수준 결정을 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로 별도재무제표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는 (주)OOOOOOO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공시되어 있고, 2018년 연결재무제표 주식에는 종속회사의 장기 파업과 그로 인한 영향을 상세히 공지하였음. 일반투자자들이 (주)OOOOOOO의 영업상황을 몰라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둘째로 당사 자회사인 (주)OOOOOOO은 당사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압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매년 그룹사 전체 생산물량 중 일부를 배분하는 사실상의 제2공장처럼 여겨지고 있음. 결국 (주)

OOOOOO의 근본적인 사업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이 없었음. 2019년초에는 노사합의로 불합리한 근로비용에 관한 삭감이 기대되는 등 당사는 2019년 당시 (주) OOOOOO의 손상징후가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웠음.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당사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2019년 사업보고서 관련해서 금감원의 감리와 상관없이 자진수정 공시한 것이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129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주)알루코의 종속기업은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문단14에 따른 자산손상 징후가 존재하여 손상검토를 수행해야 함에도 (주)알루코는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원인이 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와 노조파업 사실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알린 점, 그룹사 물량 배정을 통해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조치 수준 및 과징금액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알루코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서 조치를 1단계 감경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20%씩 추가감경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보고안건 제32호 『○○의 ○○○○○○○ ○○과 ○○ ○○ ○○○의 ○○○ ○○○○ ○○○○ ○○○○ ○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것이 확정되면 시장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수범자들에게 어떻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이 현재 시행 초기이고 이러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해서 조치사례가 점점 축적이 되면서 동 판단기준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조치양정기준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명문화할 예정임.

○ (위원) 수범자들에게 적어도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중요하게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것 정도의 예측가능성은 높여줘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본 것임.

○ (위원) “이렇게 되면 제재될 수 있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예측가능성을 줘야 될 것 같음. 계속해서 증선위에서 강조해 온 것이 사전적인 범위반 인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규제대상자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최초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음. 조문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도자료 형태로라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함.

- (보고자) 감사인들에 대한 조치 예측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4시 26분 정회)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14시 32분 속개)

□ 의결안건 제130호 『삼성물산(주) 등 693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하려면 거래소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상시, 즉, 장중에서 60% 이상의 시간 동안 호가를 제출하고 있어야 됨. 그러면 이렇게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 호가를 장중에 60% 이상 제출하고 있으려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거기에 쫓아서 공정가치가 변하게 되면 그 공정가치를 쫓아서 주문을 정정·취소해야 함. 만약 공정가치가 변했는데도 주문을 그대로 두면 요즘과 같이, 특히 고빈도 거래가 아주 유행하는 시대에는 상대방이,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불합리한 가격, 즉, 시세가 이미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문을 바로 채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됨. 그렇게 되면 시장조성자는 누적되는 체결량 때문에 도저히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음. 그래서 시장조성자의 주문은 불가피하게 정정·취소가 반복됨. 특히 요즘과 같이 상대방이 고빈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림. 외국의 경우에도 시장조성자의 빈번한 호가나 정정·취소를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런던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에게 명문의 규정으로 20만 건 중에 1건만 체결되면 된다, 다시 말해서 99.9995%는 취소가 되어도 된다고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자본시장법 규정에 비추어서 보면 시장조성행위는 어떤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매도 양쪽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가 우세라든지, 매수가 우세라든지 이런 오인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거의 없음. 그래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없고 심지어 시장조성제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지도 않음. 특히, 이 당시 해당 기간 거의 말 무렵에 한국거래소에서 점검을 한 일이 있다고 알고 있음. 시장조성자들의 주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정정·취소가 빈번하기만 하면 적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의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당연히 그 목적이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주문이 양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취소되어서는 불가능함. 그래서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서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다시 말해서 시장을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시세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둘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주문을 계속 내고 취소하고 내고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게 됨. 반면에 시장조성자 주문은 유동성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양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상시 양방향으로 제출하게 된다는 것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에는 정정·취소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동이 유도됨. 다시 말해서 시장의 변동에 선행해서 정정·취소를 하는 것임. 그런데 시장조성자 주문은 주문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시장 상황의 변동이라는 이유 혹은 위험관리라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항상 후행해서 정정·취소를 하

게 된다는 것임. 그리고 정정·취소의 수량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 오인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의 주문을 내고 정정·취소를 해야 됨. 반면에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의무수량이 있고, 그에 근접한 숫자를 양방향으로 제출하고 정정·취소한다는 차이가 있음. 그래서 이러한 증표들을 가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시장조성자 주문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 시장조성자 주문은 이런 증표들을 보면 절대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 지금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저희 조사결과 정정·취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음. 문제는 정정·취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그것을 매매양태로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그 의도를 추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결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저희 조사실무임. 사실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가격의 수급이라는 것은 심리의 결과일 것임. 그렇다면 잔량이라든가, 하나의 주문이 들어가는 그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주문들이 제출되는 속도, 다시 말하면 어떤 모멘텀을 촉발할 수 있는 것 혹은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빈번한 주문·취소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체결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음. 그래서 단지 정정이 다 허용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호가잔량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닌 소량이라는 것들은 핵심쟁점을 약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 ▶ (진술인) 정정·취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도 동의를 함. 그리고 결국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미칠 우려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급의 영향이, 결국 수급사정에 대해서 시장에 오인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맞음. 그런데 주문을 정정·취소 자체가 괜찮은데 정정·취소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함. 해외에서는 다른 고빈도 거래자들로부터 시장조성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피드 뱀프(Speed Bump)라는 제도를 두는 시장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100만분의 4초 안에 시장조성자는 정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음. 지금 1년의 기간동안에 ●●●●●●의 경우에는 230개 종목에 대해서 전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보셨음.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정정·취소를, 다시 말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주문이나 정정·취소 횟수를 다 합한 것을 분모로 삼고 이 회사가 정정·취소한 횟수를 분자로 삼아서 그 비율이 3%를 초과하면 이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 조금 전에 既주문의 취소·정정 속도, 기타 태양을 가지고 분류했다는 말씀은 앞에 하셨던 말씀과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아까 진술인 진술하신 내용 중 거래소에서 검증한 결과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 (진술인) 2020년 12월18일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방향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음. 이 자료에 보면 시장조성자의 주문을 점검했는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 들어 있음.

- (보고자) 그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말미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매수체결량과 매도체결량이 비슷한 비중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던 것임. 지금 시장조성자들은 단기매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매수체결량과 매도체결량이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러한 수준이었음.

- (위원) 정정·취소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면서 양방향으로 일정 시간, 예를 들면 60% 이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에 근접하게 주문이 유지되면 거래가 체결되어서 시장조성주문이 60%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정정·취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 (진술인) 시장가에 근접이 아니라 시장조성자의 호가는 양

방향으로 제출할 때 항상 공정가치를 계산해서 기준가의 기준을 정함. 공정가치를 계산해서 일정하게 아래쪽에서 매도하겠단, 일정하게 위에서 매도하겠단 양방향 주문을 제출함.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정해 주고 있음. 4틱(tick) 또는 8틱(tick) 그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몇 틱(tick) 사이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그 의무스프레드 안이면 충분하고,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알고리즘이 정해 줌.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1만 원이었다고 하면 저는 9,950원에 사자, 10,050원에 팔자, 이 주문 두 개를 냄. 그런데 1초 뒤에 혹은 0.5초 뒤에 공정가치가 1만 원이 아니고 9,900원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제가 9,950원에 사자는 주문을 두고 있다면 다른 거래 상대방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비싸게 사자는 주문임. 바로 채 가버림. 그것이 체결되면 다시 저는 60%를 지켜야 되니까 또 주문을 다시 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가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주문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임. 지금처럼 고빈도 거래자들이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조성자가 공정가치 변화를 쫓아서 빨리 변경하지 않으면 아주 어리석은 거래들만 계속 체결되어 도저히 시장조성자 기능을 할 수 없게 됨. 그래서 시장조성자는 항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시장조성자 주문을 제출하는 것임. 이렇듯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95% 이상이 되는 취소·정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조성자 주문의 태양이라는 것임.

- (참여자) 본 건 행위가 시세교란행위의 구성요건에서 크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는 있지만 시장조성자 특성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입장이신지?

▶ (진술인) 저는 두 가지 모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임.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이 그동안 지적하신 이 230개의 종목 1년치 중에서 이 주문 때문에 시세가 변동되었다고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하나도 없음. 그 이유는 시장조성자 주문이 시세에 영향을 주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임. 시세가 지금 1만 원이면 내가 9,950원에 사자, 10,050원에 팔자는 주문을 내는데 그 주문이 비교적 소량임. 의무수량은 항상 종목당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만한 그런 양이 아님. 두 번째는 잔량에 큰 수량이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시장조성자는 유동성공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급량 때문에, 조금 보태지는 것을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현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조성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전체결가가 1,000원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매도는 별로 없고 매수만 많음. 그러면 시장조성자는 매도호가를 1,000원에 내서 일반투자자와 시장조성자의 매도거래가 체결되도록 하거나 혹은 1,000원에 매수호가를 내서 동일한 가격에 매수가 체결되도록 하는 역할이 1

번이고, 직전체결가가 1,000원인데 매도호가 1,100원짜리를 많이 내놓고 매수호가 900원에 매수주문을 또 많이 걸쳐 놓고 하는 식으로 직전체결가에서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2번임. 무엇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 (진술인) 2번이 맞다고 보임. 시장조성자는 자기가 주문을 내서 체결을, 그러니까 적극적 체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됨. 적극적 체결을 목적으로 하면 이미 이익을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됨. 시장조성자 기능은 수동적 체결 가능성 있는 주문을 시장에 어느 정도 공급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드는 것임.

○ (위원) 제가 말씀드린 1,100원에 매도, 900원에 매수,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체결가가 바뀔에 따라 이전의 호가는 취소하고 다시 정정하는 것을 종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시장조성자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그리고 아까 금감원에서 호가공백이 있을 때 시장조성자가 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장조성자가 호가공백에 제출해야 될 의무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 1순위 호가, 2순위 호가에 공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가 먼저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동성 공급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시장조성자 자신도 과도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님.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스프레드로 주문을 내는데 마침 그 주문까지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 주문이 공백을 메꾸는 호가가 될 것이고, 그에 앞서거나 뒤에 다른 주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되거나 이런 주문이 되는 것임. 결국 시장조성원리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정해 주는 호가에 제출되는 것임. 호가공백을 메운다는 논리는 시장조성자 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림.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시장조성자의 의무사항 중에 양방향 호가를 60% 이상 주문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가격에 근접해서 있는 그 부분에서만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낼 경우에는 아까 진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가 체결됨으로써 시장조성자의 주문 유지 의무, 6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음. 어떠한지?
- (보고자) 삼성물산 종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로직(logic)을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의 호가정정취소율 자체는 시장 전체 주문량 대비해서 한 0.3% 수준의 호가관여율이 나오는 수준이었음.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를 낸 상태에서, 이미 호가 의무스프레드를 충족한 상태에서 호가가 1호가, 2호가 정도는 계속 변동하여도 제출한 호가는 이미 의무스프레드를 충족하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말하는 유지시간을 계속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변

동하지 않아도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아까 시장조성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극단적인 단순화에 금감원과 진술인의 입장 차이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음. 아까 진술인한테 한 질문에 대해서 금감원의 견해는 무엇인지?

- (보고자) 시장조성자를 market maker라고 하듯이 Maker 주문을 내는 것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임. 아까 진술인께 말씀하셨던 예시 2번이 직전체결가 1,000원인데 매도호가를 1,100원에 내고 매수호가를 900원에 내는 양태를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것이 시장조성자의 양태라고 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조성자의 양태는 직전가가 1,000원일 때 1,100원, 900원 정도에 체결가능한 가격대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 1,400~500원대로 멀리 떨어진 호가를 내고 그 사이에는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호가가 충분히 있어서 이들의 호가가 체결되기 어려운 간격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한국거래소에서 사전적으로 제시한 4틱(tick) 범위를 유지하라는 그 의무를 지키면서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한국거래소가 이야기하는 것은 4틱(tick) 범위 이내로 내라는 것이었지, 그 4틱(tick)을 유지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님.

-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거래소가 그 제도를 설계하

면서 만들어 놓은 의무사항을 시장조성자가 위반해서 직전 체결가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서 절대로 체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호가를 제시한 것을 정정·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임. 적어도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을만한 범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반복적인 정정·취소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증권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보다는 2번에 가까운 시장조성제도의 취지 하에서 4틱(tick)이라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호가를 계속해서 취소하고 다시 정정하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림.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16시 27분 정회)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16시 37분 정회)

□ 의결안건 제131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사건은 진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는 사안임. 시세조종이나 시세고정의 목적이 있었다면 혐의대상 매수거래를 했을 때 그러한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다른 거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임. 특히, 혐의대상기간은 기간 상으로는 4개월 이상이고 영업일수로는 103영업일에 달함. 그런데 혐의대상 거래일은 단지 15영업일에 불과함. 피조치자들은 5% 보유 한도까지 □□□□□□(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였던 것임.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5%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5%를 초과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방식의 매매거래였음. 간헐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당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매수관여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임. ■■■ 회장이 담보로 맡겼던 대출 금융기관별 담보는 항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임. 본 사안은 담보유지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그 시점 전후로 매매거래가 전혀 없음. 그런 것은 이 매매 자체가 반대매매방지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줌. (주)○○○○○이 조직구성이나 운영이 다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음. 하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회사임. 본 건은 기존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조치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너무 많음. 사안의 전체 맥락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증권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내었다는 점, 103일 영업일 중에 88일이 공백이라는 점, ■■■의

담보 반대매매가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36억 원까지 초과되었다는 점, (주)○○○○○ ○ 증권계좌 하나로 거래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도 시세조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 수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그 당시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인사총무팀의 경험 있는 분을 통해서 거래한 것인지?

▶ (진술인)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그쪽에서 담당 하니까 시켰던 것임.

▶ (진술인) 한도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부장이 담당을 하게 된 것임.

○ (위원) 이때 모회사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같이 매입을 한 사정이 있는지?

▶ (진술인) 그때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됐음. 모회사 주식은 기존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했었던 것임.

○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초과 위험을 무릅쓰고서 모회사 주식에만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투자전략회의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는 투자를 계속하더라도 전망이 괜찮다고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음.

- (위원) 그런데 취득하신 것이 거의 한도에 육박하게 취득하신 것인데, 그러면 조금만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본인의 임의적 의사와 관계없이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래서 실제로 초과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하였음.

-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장기 투자목적과 그것이 맞는지?

▶ (진술인) 그래도 5%룰(rule) 자체는 위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음.

- (위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음. 인사총무팀에서 매수한 점, 장마감 즈음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점, 5%가 초과되면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까지 5% 한도까지 채운 점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여러 개 겹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그 부분은 체계적이지 않은 조직운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식의 편법적인 방법을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장마감 시간대에 이루어

진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종가관리 목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진술인) 증권사 출신인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관련 담당하고 있던 ◆◆◆ 부장에게 저희가 의존하게 됐고 업무지원을 받게 됐던 것임. 그리고 저희들이 매수하면서 한도가 넘은 적은 없음. 매수해놓고 주가변동에 따라서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익일 바로 한도 관리를 위해서 처분한 경우는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모회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5%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매수하고 보고하고 공시하는 것이어서 별문제를 느끼지 못하였음. 그리고 2018년 3월7일부터 5월25일 약 3개월 동안 약 8개의 날짜에 걸쳐서 매매를 하였음. 가격과 호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였음. 시세 고착화 의도 또한 없었음. 그 3개월 동안 8개 날짜에 매수하는 것으로써 시세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함. 저는 저의 매수행위로 인해 이익을 본 것도 없고 손실을 피한 것도 없음.

○ (위원) 입금된 자금으로 그날 주식 매수를 다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다 못 사는 날도 있었음. 이틀 정도는, 한 2~3번 정도는 제가 다 못 사고 남겼던 것으로 기억을 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7월25일에는 실제 개인보유 현금과 자산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피의자의 주장이 되겠음. 2018년 7월25일에 대량보유 상황보고 할 때는 ○○○○○(주)이라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차입금을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음.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그래서 자기자금과 자산처분을 통해서 차입금을 마련하겠다는 공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잘못된 공시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임. 저희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혐의자가 큰 손실을 입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형사고발만

은 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의 핵심임. 저희가 차입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8월8일 J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F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때 확인이 된 것이지, 7월25일에 저희가 공시할 때는 자기자금으로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유상황보고의무에서 담보를 주는 부분들은 보유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10일에는 차입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F을 만나서 그 차입금을 쓰기로 되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인수자금 조달방법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놨음. 그래서 8월17일 이후에 거기에 자기자금으로 하겠다고 한 그 뒤의 공시들은 앞의 8월10일자 공시에 비추어봤을 때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임. 무자본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씀드리면 자기자금으로 이미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인수 때 대금으로 들어가 있었음. 36억 원 인수자금 중에 6억 원의 자기자금이 쓰인 것임.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이 8월8일에 확정되면서 8월10일에 차입금으로 한다는 공시를 했음. 그리고 9월5일에 주식을 담보로 넣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내용까지 공시가 되어 있음. I이 7월25일과 8월17일 공시를 할 때 상세히 듣고 얘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기억과 차이가 있음. 기본적으로 공시까지는 피의자가 관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시는 B한테 맡기었고 I과는 잠시 마주친 것에 불과하지, 둘이 이 공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얘기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피의자의 주장임. 저희가 8월10일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통해서 차입거래라고 표

시를 했다면 상대방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항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임.

- (위원) 2018년 8월17일 F으로부터 30억 원 차입사실을 누락한 것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8월17일 공시에서는 차입 사실을 누락했는데 9월5일 공시에는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 대출내역은 또 공시를 했음. 그 사이에 담당자 변경이 있었는지?

▶ (진술인) 공시가 회사에서 하는 공시가 있었고 개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공시가 있었음. A 개인에 대한 공시는 B가 담당을 했고 B가 I이라는 사람한테 외주를 준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어진 공시는 L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었음.

- (위원) 7월25일 이전에, 대량보유상황보고 이전에 그런 ○○○○○(주)의 대출을 승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4년 전 일이라 저희들도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

때그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음.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에 매도인 측의 채무를 승계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금방 결정이 났음.

- (위원)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할 때 100% 자기자금으로 다 된다는 계획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 (진술인) 7월25일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개인보유 현금자산이라고 되어 있음. ▷▷▷▷▷▷과 비상장주식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마련하겠다고 공시를 하게 된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재심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직무대리가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야 합의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알겠습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4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이 안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증선위에서 ▷▷▷▷▷펀드와 관련해서 ‘같은 종류의 증권’ 판단과 판매사를 주선인으로 의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선위에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건도 똑같이 ▷▷▷▷▷펀드의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의견 없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주)○○○○○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보고안건 제33호 『민법상 조합의 조치대상자 개선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32분 폐회)